

2015년판, 일본재흥전략(성장전략)

- 일본정부는 '15.6월, 「2015년판, 일본재흥전략(성장전략)」을 발표
- 이번에 발표한 성장전략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으므로 향후 성장전략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

□ 아베노믹스 3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재수정

- 일본정부는 '15.6.30 새로운 성장전략인 「2015년판, 일본재흥전략」를 각의 결정

- 13년, 14년판 성장전략은 농업, 노동, 의료 3분야의 암반규제개혁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법인세 인하 등이 핵심이었지만 이번 성장전략의 목표는 「생산성 혁명」임

- 로봇 개발, IoT, 빅 데이터 분야의 투자 촉진, 지방경제나 중소기업의 개혁을 추진(로컬 아베노믹스)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

- IT로 산업이나 노동구조를 혁신시키는 「제4차 산업혁명(Industry4.0)」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전략

- 아베 총리는 “성장전략은 새로운 단계로 돌입한다”고 선언, 경제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급 제약의 해소가 중요하며 생산성 향상으로 당면한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

< 성장전략의 성과 >

정권 출범 전	성과와 실적
▶ 실질 성장률(목표 2%)	
'13~'14년 평균 0.8%	
▶ 설비투자	
64.9조 엔(12년도)	69.3조 엔(14년도)
▶ 추가	
10,080엔('12.12.25)	20,428('15.6.22)
▶ 창업률	
4.6%(12년도)	4.8%(13년도)
▶ 여성·고령자 취업률	
여성 68%(12년)	70.8%(14년)
고령자 58%	60.7%
▶ 대기아동 해소	
-	'13~'14년도에 19.1만 명 보육 환경 확대
▶ 외국인 관광객	
836만 명(12년)	1,341만 명(14년)
▶ 고도외국인재 활용	
-	'15.2월까지 2,799명 취업
▶ 농수산물·식품 수출	
4,497억 엔(12년)	6,117억 엔(14년)

자료 : 닛케이신문(2015.6.22)

□ 2015년판, 일본재흥전략 주요 내용

1. 일본산업재흥 플랜

(1)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

- 기업의 수익성 확립·향상을 위한 「공격적인 경영」 촉진
 - 기업 지배구조의 강화
 -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과 투자가의 대화 촉진
 - 성장지향형의 법인세 개혁 등
- 일본 GDP의 약 70%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·생산성 향상
 - 「서비스 산업 챌린지 프로그램」에 따라 업종횡단·업종별 시책을 신속히 실행
 - 2020년까지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2.0%로
- 글로벌한 벤처기업의 육성
 - 글로벌·벤처기업 창출 못자리인 대학 개혁
 - 실리콘밸리와 일본의 가교가 되는 글로벌·벤처 네트워크를 구축, '16년도부터 5년 이내에 일본에서 200사를 실리콘밸리로 파견
 - 차세대를 선도할 글로벌·벤처의 육성 지원 등
- 성장자금·리스크머니 공급 촉진 등
 - 다양한 자금공급 기법을 동원한 성장 머니의 공급 촉진, 민간자금 활용 등

- IoT·빅 데이터·인공지능 등에 의한 산업구조·노동구조의 변혁 대응
 - 산업·노동구조의 변혁에 신속한 대응 등

(2) 고용제도개혁·인재력의 강화

- 일하는 방식의 개혁 실행·실현
 - 과도한 노동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
 - 「고도 프로페셔널 제도」조기 창설 등
- 미래를 지탱하는 인재력 강화(고용·교육시책) 패키지
 - 기업의 인재육성 활동 등 정보제공 촉진
 - 커리어에 따라 갖춰야 하는 지식·능력·기능을 확인하는 「셀프·커리어검진(가칭)」 도입 촉진
 - 대학 등에서 「취업실천력 육성 프로그램」인정제도의 창설
 - 「실천적인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」의 제도화 등
- 예측 가능성이 높은 분쟁해결시스템 구축
 - 해고 무효 시 금전구제제도의 형태와 그 필요성을 포함한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등

- 고령자의 활약 촉진
 - 고령자의 취업 매칭 기능의 비약적 향상·강화
- 여성의 활약 촉진
 - 보육사 등 보육 담당자를 확보
 - 남성의 육아 참가 촉진을 위해 배우자 출산 직후의 휴가 취득률을 '20년에 80%로
 - '13~'17년도를 통해 약 40만 명의 보육 환경을 정비
 - 기업의 장시간 노동 시정을 위한 정보 개시·가시화 추진
 - 여성이 일하기 편한 제도 등의 재검토
 - 화장실 등 여성의 「생활의 질」 향상 등
- 외국인재의 활용
 - 고도외국인재의 수용 촉진, 유학생의 활약 지원
 - IT·관광 등 「전문적·기술적 분야」에서 외국인재의 활약 촉진, 정보통신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'20년에 6만 명으로 배증

(3) 대학개혁/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추진/세계 최고의 지재입국

- 이노베이션·내셔널시스템의 실장
 - 경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「국립대학 경영력 전략」 실행
 - 「특정 연구대학」, 「탁월대학원」, 「탁월연구원」(가칭) 제도의 창설
 - 복수연구기관이 연구자 급여를 분담하는 「크로스 어포인트먼트」 제도의 적극 도입 등
- 지역 이노베이션의 추진
 - 산학관 매칭 기능이나 지역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전략의 강화
- 「로봇 신전략」의 추진 등
 - 「로봇 신전략」에 따라 차세대 기술개발이나 규제제도개혁을 추진

(4) 세계 최고 수준의 IT 사회의 실현

- 국민·사회를 지키는 사이버 시큐리티
 - 안전·안심한 사회 구축을 위한 사이버 시큐리티 강화
 - 시큐리티 산업의 육성·인재의 강화
- 안전·안심을 전제로 한 마이넘버 제도의 활용
 - 호적이나 여권, 증권 분야 등에 마이넘버 이용·활용 범위 확대

-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변혁 등의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
 - 안심·안전한 정보의 유통을 맡은 대리기관(가칭)의 창설
 - 라이프 이벤트에 따른 신청 등의 절차 전자화·원 스톱화
 - 대규모 병원의 전자 카르텔 보급률을 '20년도까지 90%로 향상
 - 셰어링 이코노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 등
- 미래사회를 지탱하는 정보통신 환경 정비
 - 모바일 분야의 경쟁력 촉진
 - 무선LAN 이용 환경의 전국 정비 추진 등

(5) 입지경쟁력을 더욱 강화

- 성장지향형의 법인세 개혁
 -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 인프라의 기능 강화
- 국가전략특구의 강화
 - 남은 집중 활동 기간에 특구 실현을 가속적으로 추진
- PPP/PFI의 활용
 - 공공시설 등 운영권 방식의 추진 강화 등
- ④ 금융·자본시장의 활성화, 공적·준공적 자금의 운용 등
 - 금융 그룹을 둘러싼 제도의 모습 등에 관한 검토
 - 공적·준공적 자금의 운용 등 재검토
 - 국제결제나 전자기록채권의 활용 등 결제 고도화
- 환경·에너지 제약의 극복
 - 철저한 에너지절약 추진
 - 고정가격매입제도의 재검토
 - 안전이 확인된 원전의 재가동 추진
 - 전력·가스 시스템 개혁으로 요금을 최대한 억제 등

(6) 지역 활성화·지역구조 개혁의 실현/중견기업·중소기업·소규모사업자의 혁신

- 성장전략을 주요 기축으로 하고 도시·사람·일 창생분부와 연계하여 지방창생에 주력
- 전국의 중견·중소기업·소규모사업자의 수익성·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춰 노력

2. 전략시장창조플랜

(1) 국민의 「건강수명」 연장

- 헬스 케어 산업의 창출 지원
 - 지역관 차세대 헬스 케어 산업협의회 등을 통한 지역의 헬스 케어 비즈니스 창출 지원
- 의료·간병 등 분야의 ICT화를 절저하게 추진
 - 마이넘버를 이용하여 의료 분야에 번호제도 도입
 - 의료 등 분야에서 데이터의 디지털화·표준화의 추진/지역 의료정보 연계(간병 포함) 등의 추진
 - 의료 간병 정책(의료 간병의 질 향상, 연구개발 촉진, 의료비용의 적정화 등)에 대한 데이터 활용 촉진
 - 민간 헬스 케어 비즈니스 등에 의한 의료 등 분야의 데이터 활용 환경 정비 등
- 의료의 국제전개의 촉진 등
 - 외국인 환자의 수용에 의욕과 능력이 있는 국내 의료기관을 「일본국제병원(가칭)」으로서 해외에 홍보
 - 의료의 국제전개(아웃바운드·인바운드)를 촉진

(2) 그린·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의 실현

- 그린·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의 실현 및 글로벌 시장 획득 활동
 - CO2 배출이 적은 수소사회의 실현
 - 환경·에너지 제약에서 탈각한 사회의 실현 등

(3) 안전·편리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인프라 구축

- 「인프라 장수명화 계획(액션플랜)」의 책정
 - 새로운 인프라 비즈니스를 지탱하는 신기술의 개발·사회 실장이나 안전·쾌적하게 사람·물건이 이동할 수 있는 사회상의 실현
 - 차세대 사회 인프라용 로봇의 연구개발·도입
 - 세계 최고의 ITS 구축을 위한 전략의 전개 등

(4) 세계를 매료하는 지역자원으로 수익을 늘리는 지역사회의 실현

<농림수산업>

- 생산현장의 강화
 -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생산·유통 시스템의 코스트 삭감
 - ICT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생산성을 더욱 향상
 - 농지 중간 관리기구의 재검토에 의한 농지의 집적·집약화를 위한 활동을 가속
 - 임업·수산업의 성장산업화 등
- 국내 밸류체인 고도화
 - 마켓인(소비자의 니즈를 중시)의 발상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연결
 - 쌀 정책 개혁의 착실한 실시
 - 6차산업화의 추진, 수출의 촉진

<관광>

- 일본관 DMO(Destination Management/Marketing Organization)의 확립과 관광 진흥 활동에 대한 지원
 -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과 일본에서의 소비액 연간 4조 엔의 조기 달성
 - 지방창생에 이바지하는 관광지역 만들기
 - 지방에서 면세점을 '20년까지 2만 점으로 확대
 - 선제적이고 「공격적」인 인수 환경 정비 등
- 인 바운드 신시대를 위한 전략적 활동
 - 「관광입국 실현을 위한 액션·프로그램 2015」
 - 항공·버스 등의 교통기관이나 숙박시설 등의 공급 확보
 - 외국어 대응 등의 수용 환경 정비 등

3. 국제전개전략

- 대내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 환경의 개선 및 유치 체제의 진화
- 「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 십」의 전개
 - 아시아개발은행(ADB)과 연계 강화
 - 국제협력은행(JBIC)의 기능 강화
- 도시개발을 포함한 종합적 광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관민 연계 체제의 강화
- 콘텐츠를 핵으로 한 쿨 재팬의 추진 등

4. 개혁의 모멘텀 : 「개혁 2020」의 추진

- 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·시스템 솔루션 수출
 - 차세대 교통시스템·자동주행기술의 활용
 - 신기술을 사용한 버스 차량으로 정시 운행, 차내 전도 방지
- 분산형 에너지 자원의 활용에 의한 에너지·환경 과제의 해결
 - 지방에서 발전한 재생에너지를 도시부의 高소비지에 수송
- 첨단 로봇 기술에 의한 유니버설 미래 사회의 실현
 - 고령자나 장애인, 외국인도 스트레스 없는 사회로
- 고품질의 일본식 의료 서비스·기술의 국제전개(의료의 인 바운드)
 - 외국으로부터의 도항 의료를 증가시키기 위해 일본 방문 전부터 귀국 후까지 서포트
- 방일 관광객의 확대를 위한 환경 정비 등
 - 관공입국의 쇼케이스화
 - 도쿄 주요 철도역의 단차해소나 안내정비를 추진
 - 나리타·하네다 공항에 액세스 개선
- 대일 직접투자의 확대와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·향상
 - 대일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유치 대책
 - '20년에 도쿄 임해부에서 해외기업·투자가를 위한 유치 이벤트 개최

□ 성장전략에 대한 반응 및 평가

- 경제동우회 고바야지 요시미즈 회장
 - 아베노믹스의 제3의 화살인 성장전략은 “경영자들의 실천이 중요함으로 2015년판, 일본재흥전략도 그 실천을 위해 일본정부와 함께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겠다고” 언급
 - 재흥전략에 명기된 TPP, 日-EU FTA, 법인세 개혁의 조기 실현 등은 일본의 입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확실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
 - 이런 것들은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불가피하지만 조기에 명목 3%, 실질 2%의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참여·활용이 충분하지 않는 농림수산업이나 방일 외국인의 증가에 대응한 관광산업 등의 암반규제 개혁 등 즉효성이 있는 시책을 구체적이고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

- 닛케이신문은 주가 상승이나 설비투자 증가 등 과거 2년간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도 2015년 개정판은 ‘14.6월에 개정한 「일본재흥전략 2014」에 비해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
 - 노동시장 개혁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으며 실행력과 속도가 부족한 것이 과제
 - 이민이나 출생률 향상 정책과 같은 인구정책에 관한 언급이 없는 등 아직 포함시켜야 하는 이슈도 많다는 지적
- 산케이신문은 재정 재건과의 양립을 우려, 일본재흥전략의 개정과 함께 각의 결정된 재정건전화계획은 명목 3% 이상의 성장이 전제가 되어 있으므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를 기대하려면 더욱 성장전략의 실효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착실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지적

□ 시사점

-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정책들이 많아 성장전략을 매년 개정하는데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
 - 의료나 기업 지배구조 등 일부 분야에서 규제완화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,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, 새로운 이슈를 추가하는 것보다 지연되고 있는 개혁이나 성장전략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제시할 필요
- 고도외국인재의 활용정책 추진으로 정보통신업에서 한국 인재들이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인력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
 - 2015년판 성장전략에서 강조하는 IT, 로봇 분야는 한국도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므로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모색할 필요
- 특히 일본판, 「산업혁명 4.0」은 제조업의 IT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우리기업들도 참고할 필요

<참고자료>

제21차 산업경쟁력회의(2015.6.11) “『日本再興戰略』改訂2015(骨子案)”,
제22차 산업경쟁력회의(2015.6.22) “『日本再興戰略』改訂2015(素案)”,
경제동우회 대표의 발언(2015.6.22.) “今年度の『日本再興戰略』と『骨太の方針』をめぐる議論について”, 마이니치신문(2015.6.22), 아사히신문(2015.6.22), 닛케이신문(2015.6.22/23), 요미우리신문(2015.6.21/24), 산케이신문(2015.6.22/24)